

파이낸셜 뉴스



▲ 8월 5일 전자신문 18면

정부가 벤처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한 벤처기업의 역할, 과제 그리고 정부가 펼쳐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짚어 본 '벤처, 이제 다시 시작이다' 기획시리즈

디지털타임스



▲ 7월 30일 한국경제 14면

내수불황으로 고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CEO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영업망을 점검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는 등 일에 파묻혀 여름을 나고 있음을 보도한 기획기사

중기청, 수출 중소·벤처 법률서비스 자문단 운영키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수출 중소·벤처 법률자문단' 과 '해외 법률자문단' 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8월 8일 밝혔다. 중기청은 또한 연말까지 온라인을 통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중소·벤처 법률자문단' 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초적인 법률 애로사항을 무료로 상담하고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법률자문단' 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분쟁 해결은 물론 특허·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등에 대한 자문도 실시할 방침이다. 자문 비용은 건당 최고 200만원까지, 개별기업당 4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초 법률상담은 법무부에, 법률자문단을 통한 자문지원은 중기청이나 중진공에 신청하면 된다.

산자부, '산업기술 보호법' 내달 국회상정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기술 등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대책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산업기밀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 유출 예방책과 구체적인 처벌 내용 등을 담은 '산업기술 보호법(가칭)' 초안을 완성, 국가정보원·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협의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8월 5일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법안으로, 국회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보안설비 구입과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산자부는 69개 관련 기업과 민간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업보안협의회' 와 최종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 등 첨단기술을 보호대상 기술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부실기업 코스닥 진입요건 강화

내년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부실기업의 진입은 더 어려워지고 퇴출은 더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은 건전성이 높아져 거래가 늘어나고,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와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사상 최악의 침체에서 허덕이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4/4분기 중 기업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퇴출요건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와 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이 지난 1999년 벤처붐을 타고 급팽창했으나 이후 상당수 등록기업들이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부실화한 것이 침체의 원인이라고 보고 부실기업을 확실하게 쫓아내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에서 부실기업이 사라지면 주식거래가 활발해져 유망한 기업들의 경우 문을 닫는 극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M&A를 통해 회생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진입·퇴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